

經濟成長의 停滯要因: 西獨과 日本의 事例와 韓國에 대한 示唆點

金 秀 勇*

논문 초록: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의 일환으로 서독과 일본에서의 경제성장의 정책요인을 분석한다. 1960년대 이후 성장이 정체된 원인으로서는 이윤압박으로 인한 고정자본 증가율의 하락, 다양한 이익집단의 등장으로 인한 경제효율성의 저하, 미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한 catch-up 성장효과 감소, 그리고 경제성장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사고의 변화라는 네 가지의 요인을 검토한다. 이들은 모두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한 때는 경제기적이라 불렸던 이들 두 나라의 성장정책요인을 현재의 한국에 적용해 본다. 대체적인 결론은 한국의 고도성장 전망은 아직도 밝다는 것이다.

핵심주제어: 경제성장의 정체, 한국 경제의 성장전망
경제학문헌 목록 주제분류: O4

I. 序 論

세계 여러 나라의 성장경험을 살펴보면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경제성장의 속도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0여 년간의 세계 전체의 성장은 그 이전의 100여 년에 비교하면 매우 급속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만 본다면 1970년대 초까지는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매우 높았고, 그 이후에는 크게 낮아졌다. 국가별 소득수준의 격차는 산업혁명 이후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Bairoch(1981)에 의하면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장 빈곤한 나라의 1인당 소득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본 연구는 산학협동재단의 1996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 본 논문의 수정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익명의 두 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수준의 비율은 1860년에는 4.5 : 1 정도였으나 1977년에는 29.1 : 1로 벌어졌다. 이 기간에 선진국의 평균 1인당 소득은 8배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개도국의 경우는 2배에 그쳤다.¹⁾ 특정 국가를 보더라도 영국이나 아르헨티나는 20세기의 상당기간 동안 평균 이하의 성장성과를 나타낸 반면, 일본이나 독일은 빠른 성장을 지속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의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의 성장률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즉, Baumol(1986)이 발견한 소득수준의 수렴화(convergence)현상은 일부 국가들의 특정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대상국가들의 범위를 넓히면 수렴현상을 찾을 수 없다. 신고전파 성장모형의 중요한 결론과 위배되는 이러한 사실은 내생적 성장모형의 등장을 유발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고전파 모형에서의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이라는 설명을 불러왔다.²⁾ 즉 저축률, 인구증가율, 생산함수의 위치에 따라 steady-state 소득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 조건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 수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라는 성과를 나타냈다. 현재 한국의 정책당국자나 경제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앞으로도 과거와 비슷한 고도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편에서는 이제는 고도성장의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는 성장의 기대를 낮추어 6% 또는 5% 정도의 성장이면 적정수준이라는 판단하에 정부나 기업의 정책이나 계획이 수립되어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수익성 높은 투자의 기회도 크게 줄었고 노동의 공급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인데다 기술의 도입이나 개방을 통한 진보의 속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재생산능력의 성장 자체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고전파 성장모형에 입각한 성장회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요소투입의 확대에 크게 의존한 한국의 성장은 앞으로는 정체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Krugman(1994) 등의 주장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기적적이라고 불리던 고도성장은 길어 봤자 20년 또는 30년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비관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한국 경제는 당분간 고도성장을 지속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인적 자본의 지속적 확대, 여전히 큰 선진국과의 생산성

1) Dosi and Fabiani(1994), Table 6.2에서 재인용.

2) 예컨대, Barro(1991), Mankiew, Romer, and Weil(1992).

격차, 기술흡수능력의 향상 등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에 유리한 여건조성에 정책노력이 기울여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의 대열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때 이른 고도성장 포기론이 오히려 성장활력을 위축시키게 된다는 주장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이 말해 주듯이 과거의 빠른 성장과 빠른 자본축적이 앞으로의 성장속도를 늦추게 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 고도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보다 앞선 나라들에서의 성장정체의 요인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독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기간 동안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는데, 1960년대 말 또는 1970년대 초 이후 이들 나라에서 성장속도가 떨어진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경제의 성장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성장이론의 논의나 다양한 경험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만 특정 국가들의 사례 검토도 중요하다. 특히 경제성장 과정에서 서독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정도가 본고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제 II 절에서는 먼저 서독과 일본의 성장경험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본다. 이들의 고도성장과 1970년대 이후의 성장정체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 III 절에서 요약한다. 제 IV 절은 본 논문의 핵심인 성장정체의 원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윤압박에 의한 고정자본 증가율의 하락, 소득재분배 목적의 이익집단 형성, catch-up 효과의 축소,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성장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며, 서로의 연관관계도 깊을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수량화하여 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없고 또한 서독과 일본 두 나라에서 성장정체의 원인으로서의 중요도에서도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이 성장둔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노동투입량의 감소나 증가율의 둔화도 성장을 하락의 주요 요인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연간 근로일수와 1일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또한 인구구성의 변화도 노동투입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별도의 논의를 생략한다. 마지막 제 V 절은 서독과 일본 경험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고도성장 지속의 가능성을 평가해 본다.

II. 西獨과 日本의 高度成長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의 장기적인 성장경험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복구가 대체로 마무리된 1950년부터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1973년까지의 기간은 이례적으로 빠른 성장을 기록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1870년 이후의 성장경험을 4개의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표 1>에 나타나듯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950-73년 기간의 성장률은 그 전이나 후의 기간에 달성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다.³⁾ 이 표에서 보면 1950-73년 기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두 나라는 서독과 일본이다. 뿐만 아니라 1913-50년 기간에 비해 성장률이 가장 많이 높아진 두 나라도 서독과 일본이고 1973-84년 기간에는 1950-73년 기간에 비해 성장률이 가장 크게 떨어진 두 나라도 서독과 일본이다. 즉, 두 나라에서 1950-73년 기간에 경험한 고도성장은 이들만의 독특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교할 때 성장속도가 특히 높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3년 이후의 성장의 둔화 속도도 역시 특히 높았다는 것이다.

1950년 이전의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성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편이 아니었다. 일본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표 1> 주요 국가의 GDP성장률(1870-1984)

	I 기 1870-1913	II 기 1913-1950	III 기 1950-1973	IV 기 1973-1984	II기에서 III기로의 가속	III기에서 IV기로의 감속
프랑스	1.7	1.1	5.1	2.2	+4.0	-2.9
독일	2.8	1.3	5.9	1.7	+4.6	-4.2
일본	2.5	2.2	9.4	3.8	+7.2	-5.6
네덜란드	2.1	2.4	4.7	1.6	+2.3	-3.1
영국	1.9	1.3	3.0	1.1	+1.7	-1.9
미국	4.2	2.8	3.7	2.3	+0.9	-1.4

자료: Maddison, 1987, p. 650.

3) 이 기간은 흔히 근대 경제성장의 황금기(the golden age)라고 불리운다. 이 기간에는 성장률이 예외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도 완만했고 인플레이션율도 적절한 수준이었다.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독일의 경우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19세기 말부터 영국의 생산성을 앞질러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해 왔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미국에 대비하여 평가할 때 Maddison (1987, Table 4-5)에 의하면 1984년의 구매력평가 달러기준으로 서독의 노동시간당 GDP는 1950년에는 미국의 33.6%였으나, 1973년에는 72.8%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서 1950년에는 미국의 13.9%에 불과했으나 1973년에는 43.8%가 되었다.

III. 高度成長과 成長의 停滯에 對한 一般의 說明

1. 日本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에 다시 독립을 획득할 때까지 연합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점령군은 일본을 무장해제하고, 정부조직을 민주적으로 개편하였으며, 토지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재벌해체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실시로 일본 사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었다.⁴⁾ 과거 전쟁관련 중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기술진보 노력의 결실이 경제성장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을 보다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우방관계로 전환됨으로써 선진기술의 이전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GATT와 IMF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Bretton Woods체제하에서 세계무역의 확장과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무역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일본의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한국전쟁(1950-1953)은 일본 경제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대대적인 수요확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1950년대 전 기간에 걸쳐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⁵⁾

투자확대를 위한 저이자율정책, 중화학산업의 수입대체를 위한 보호정책, 엔

4) 상세한 내용은 Kunio(1994, Ch. 5) 참조.

5) Minami, 1994, p. 49.

화의 저평가정책, 그리고 ‘경제성장의 추구’를 국가제일의 목표로 설정한 사회 분위기도 새로운 성장촉진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⁶⁾ 또한 일부에서 봉건적이라고 비난한 평생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식 노사관계가 일반적으로 채택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국방지출의 삭감으로 정부지출의 보다 많은 부분이 생산적 부문에 투입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1973년 이후 성장의 정체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논의될 수 있다.⁷⁾ 우선 석유가격의 급등은 거의 모든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 물가 상승과 생산감소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일본의 해외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2차 석유파동은 1차의 경우보다 작은 충격을 주었지만 1985-1987년 사이의 급격한 엔화의 평가절상은 성장을 위축시켰다.

고도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노동력의 부족현상은 출생률의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life-cycle가설에 의하면 인구의 고령화는 저축률을 낮춤으로써 투자재원을 축소시킨다. 고도성장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大國化는 일본이 더 이상 독자적으로 보호와 지원에 입각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세계 전체적으로 기술혁신의 속도가 낮아짐으로써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속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 대대적으로 해외기술을 도입했던 일본으로의 기술이전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일본의 성장과 기술진보로 인한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의 축소라는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을 과거보다 낮추었다.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총생산에서의 비중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산업구조의 변화도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55-1970년 기간에는 제조업의 GDP에서의 비중이 28%에서 36%로 높아졌는데, 이 비율은 1995년에는 25% 이하로 떨어졌다. Ito (1996)의 계산에 의하면 1960-1992년 기간에 제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6.52%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건설, 운송, 금융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서

6) 1961-1970년 기간의 國民所得倍增計劃은 연평균성장률 목표인 7.2%를 훨씬 초과하는 10.9%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7) Minami(1994, Ch. 3) 참조.

비스산업에서의 생산성 증가율은 3.79%에 그쳤다. 이 밖에 과거 고도성장시기에는 성장촉진요인으로 작용했던 일본 특유의 제도가 여건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기능을 못하거나 오히려 성장저해요인이 되는 경우들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평생고용제도, 주거대출은행제도, 系列, 교육제도 등을 들 수 있다.⁸⁾

2. 서독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 경제는 극도로 황폐한 상황에 있었다. 독일 전체로 민간인을 포함하여 800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자가 되었고, 부상자도 400만 명이 되었다. 주택의 50%가 파괴되거나 크게 손상되었으며, 운송체제의 붕괴와 석탄부족으로 인한 에너지위기가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그러나 산업시설의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주택의 경우보다 훨씬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중에 이루어진 투자로 인해 서독에서 전후의 산업설비의 규모는 1939년의 수준보다 오히려 커졌다는 추정이다.⁹⁾ 또한 잘 훈련된 노동력이 과거에는 독일 영토였으나 전후에 소련이나 폴란드에 병합된 지역으로부터 서독으로 이주해 왔고,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도 많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산업시설의 피해가 적었고 동독이나 외국영토가 된 지역으로부터 노동력의 유입이 이루어져 서독 경제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부흥시킬 수 있었다.

1947년 6월에 발표된 마셜플랜(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은 독일 경제성장의 강력한 활력소로 작용하였다. 서유럽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자유경제체제의 수립을 돕기 위한 미국의 원조계획은 물론 서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서독에 대한 마셜플랜의 원조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한 원조규모보다 작았다. 그러나 수송,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투자, 철강·섬유산업의 시설확장과 원료조달 등에서 마셜플랜의 기여가 특히 컸다. 이 밖에 서독의 기업가나 엔지니어들에 대한 기술지원, 수입지불능력이 부족한 국가로의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제공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⁰⁾

서독 경제가 빠른 시간 내에 세계경제로 재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마셜플랜의

8) 상세한 내용은 Ito(1996) 참조.

9) Braun, 1990, pp. 145-146.

10) Braun, 1990, pp. 152-154.

덕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전 직후 미국이 가졌던 서독의 경제부흥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경제적·정치적 협력관계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따라서 마셜 플랜은 서독의 정치적·경제적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서독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으로써 개인재산권 보장, 시장경제체제, 자유무역정책을 주장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었다.¹¹⁾

1948년 6월에 실시된 통화개혁으로 그 이전까지 널리 이루어지던 가격통제, 암거래, 물물교환, hoarding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화폐의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됨으로써 생산활동이 촉진될 수 있었다. 마셜플랜과 함께 통화개혁은 장기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독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이 선택한 경제체제는 Walter Eucken과 Franz Boehm 등 Freiburg학파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한 자유경제체제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한 것은 자유방임체제는 아니었지만 경쟁적 경제질서의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경제안정은 통화공급의 철저한 통제로 달성하고 소득의 불균등은 누진세제를 통해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고는 주로 Alfred Mueller-Armack에 의해 정립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라는 개념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 개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Ludwig Erhard에 의해 실천에 옮겨졌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 후생을 위한 효율적 생산과 사회적으로 균형된 질서 속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시장경제하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정부는 자력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만을 돕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에 따른 경쟁적 시장 추진정책은 마셜플랜과 통화개혁으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한 서독 경제에 효율적 자원배분의 시장질서를 제공하였다.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업가들의 전망이 호전되어 투자가 늘어났고 투자에 대한 높은 감가상각의 허용과 같은 조세혜택이 투자를 더욱 부추겼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자본재수요의 확대, 마르크화의 저평가, 무역자유화정책으로 인한 특화와 규모의 경제효과, 선진생산기술과 경영방법의 습득 등의 여러 요인도 서독

11) Carlin, 1996, p. 463.

경제의 투자와 수출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950년대의 높은 성장을 반영하여 1960년에는 실업률이 1% 이하로 낮아졌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았고 경상수지는 1951년부터의 흑자를 계속 나타냈다.

1960년대의 성장속도는 1950년대의 실적에 크게 못 미쳤고 1970년대에는 더욱 낮아졌다. 1960년대의 성장률 저하는 노동공급의 애로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한데다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와 교육기간의 장기화로 노동참여율이 낮아졌고, 또한 1961년의 베를린장벽으로 동독으로부터의 인력의 유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독은 노동력의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Gastarbeiter)를 고용함으로써 보충하였지만 이들의 생산성은 동독 노동자들에 비해 크게 낮았다.¹²⁾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 세계적인 경기침체, 고정환율제도의 붕괴, 인구증가율의 감소, 세계시장에서의 교역조건 악화 등은 1970년대에 투자와 수출의 증가를 계속 압박함으로써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IV. 成長停滯의 原因

1. 성장회계

일본과 서독 두 나라에서 과거에 비해 1973년 이후에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진 요인은 1차적으로 성장회계방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Denison(1967)의 선구적인 연구 이래 수많은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성장요인 분석이 있어 왔지만 본고의 목적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분석결과는 Maddison(1987)에서 찾아볼 수 있다. Maddison은 일본과 서독을 포함하여 선진 6개국의 경우를 분석하였는데, 고도성장기인 1950-1973년 기간과 성장정체기인 1973-1984년 기간을 분리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사용한 기본식은

$$\dot{Y} = \dot{Y} - \alpha \dot{L} - (1 - \alpha) \dot{K} - \dot{S}$$

12) Braun, 1990, pp. 168-169. 서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1960년의 25만 명에서 1970년에는 180만 명으로 늘어났다.

으로서 \dot{Y} 은 GDP증가율, \dot{L} 은 노동자의 교육과 성별 구성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질적 변화를 감안한 노동투입량(augmented labor)의 증가율, \dot{K} 은 질적 변화를 감안한 자본투입량(augmented capital)의 증가율, 그리고 \dot{S} 은 경제구조의 변화, 앞서 가는 미국에 대한 catch-up 효과, 국제무역효과, 규모의 경제효과 등 9개의 보완적 요인의 성장기여도를 나타낸다. α 와 $(1-\alpha)$ 는 각각 노동과 자본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dot{I} 은 '잔여(residual)'로서 체화되지 않은 기술진보와 통계오차 등 측정할 수 없는 요인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1950-1973년에 비해 1973-1984년 기간중 연평균성장률은 <표 1>에서 보듯이 서독에서는 4.24%, 일본에서는 5.59% 포인트가 각각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Maddison은 노동의 양, 노동의 질 등 14개 항목을 사용하였는데, 큰 영향을 나타낸 몇 가지 요인의 기여도를 보면 <표 2>와 같다. 서독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감소나 증가율 둔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연간 근로일수의 감소와 1일 근로시간의 감소가 노동투입량 변화의 주원인이고 자본의 경우는 투자부진으로 자본스톡의 증가율이 낮아진 것이다. 노동퇴장은 특히 일본의 경우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에서 자영업의 고용비중이 크고 평생고용제도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위장실업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catch-up 효과는 가장 앞선 국가인 미국과 비교한 노동생산성 격차의 크기와 이 격차의 축소속도의 함수로 나타내는데, 서독과 일본에서 1950-1973년 기간에 미국과의 격차가 이미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1973-1984년 기간에는 catch-up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구조변화 효과는 시간에 따른 산업구조변동의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줄어들고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장둔화효과다. 농업부문이 축소되고 대신 공업부문이 확대되는 기간에는 이 구조변화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지만 서독이나 일본에서 1973년 이후에는 매우 작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 2>에 열거된 5개의 요인이 서독의 경우 성장정체의 53%를 설명해 주고 일본의 경우는 67%를 설명해 준다. 표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의 기여까지 합하면 설명력은 서독의 경우 78%, 일본의 경우 89%로 높아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회계방식은 성장률 변화의 1차적인 설명은 제공하지만

〈표 2〉 서독과 일본의 성장률 하락에 대한 주요 요인별 기여도(1973-1984)

	서독	일본
성장률 변화	-4.24	-5.59
노동투입량	-0.87	-0.69
노동퇴장(labor hoarding)	-0.32	-1.12
비주거용 자본투입량	-0.48	-0.34
catch-up효과	-0.28	-0.58
구조변화효과	-0.31	-1.01
기타 요인들	-1.04	-1.25
합계	-3.30	-4.99
잔여	-0.94	-0.60

자료: Maddison, 1987, Table 22.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치 못하다. 예컨대, 자본량의 증가율이 떨어져서 성장률을 낮추었다는 설명은 되지만 왜 자본축적이 둔화되었는가의 설명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동투입량의 감소 또는 증가율의 둔화도 노사관계제도나 사회계층 간의 대립관계, 정부정책 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변화를 차례로 살펴본다.

2. 고정자본 증가율의 하락

성장회계방식의 분석이 보여 주듯이 일본과 서독에서 성장이 정체된 주요 요인의 하나는 자본스톡의 증가둔화이다. Armstrong, Glyn, and Harrison (1991, Table 14-3)에 의하면 경제 전체로 자본스톡의 연평균증가율은 일본의 경우 1960-73년에는 12.4%였으나 1973-89년에는 7.0%로 낮아졌고, 서독을 포함하는 유럽의 경우 5.2%에서 3.2%로 낮아졌다. 제조업만 보면 하락의 정도는 훨씬 심하다. 일본에서는 14.0%에서 6.0%로, 유럽에서는 5.1%에서 1.7%로 떨어진 것이다.

자본스톡의 증가가 둔화되는 것은 물론 투자의 부진 때문이다. 총투자는 계속 증가하더라도 순투자는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스톡의 증가율은 낮아진다. 그렇다면 투자의 증가를 둔화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Armstrong, Glyn, and Harrison은 이윤율의 하락으로 인한 투자의 위축이

1973년 이후 선진국 경기침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이윤율이 낮아진 원인은 1960년대의 고도성장에서 찾고 있다. 즉, 고도성장은 노동공급에 비한 자본축적의 과잉, 그리고 완전고용으로 인한 노조의 세력확대 및 급격한 임금상승을 초래했고 석유소비의 격증으로 OPEC의 유가인상이 성공적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¹³⁾ 실제로 일본과 유럽에서는 과거에 비해 노동생산성의 증가속도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반에 실질임금은 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임금소득분배율도 전보다 높아졌다.

Glyn, Hughes, Lipietz, and Singh(1990)도 1970년대 초에 성장의 황금시대가 종료된 원인은 OPEC에 의한 석유파동과 같은 외적 요소가 아니라 생산성의 정체와 이윤압박과 같은 내부적 긴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일본, 서독 등에서 1960년대 초와 비교하여 1970년대 초에는 자본/노동 비율이 더 빠르게 증가했지만 노동생산성의 증가속도는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들 선진국에서 1960년대 이후 이윤율과 이윤의 소득분배율은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일본과 서독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1952-82년 자료를 사용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윤율 또는 이윤소득분배율이 고정자본스톡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1960년대의 노동시장에서의 초과수요증가와 노조파업의 확대 외에도 단체교섭에서 명목임금의 생계비에 대한 연계, 고용보장, 연금지급, 노동시간 단축 등이 폭넓게 적용됨으로써 이윤압박이 심화되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의 주요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국내외에서의 경쟁의 확대가 이윤마진을 축소시켰다.

(1) 일본에서의 투자정체

이윤율 하락에 의한 투자의 정체는 자본투입량뿐만 아니라 총수요의 위축을 통하여 고용의 감소와 노동시간의 단축, 연구개발노력의 축소 등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투자부진의 성장에 대한 효과는 성장회계에서 자본투입량 크기의 변화로 나타나는 효과보다 훨씬 크다. 일본에서 실질총고정자본투자의 증가율은 1955-60년과 1961-70년 기간에 각각 16.0%와 13.9%였음에 비해 1971-80년 기간에는 3.7%로 크게 낮아졌다.¹⁵⁾

13) Armstrong, Glym, and Harrison, 1991, Chs. 12-14.

14) 예컨대, 1952-1973년 기간에 제조업 총자본스톡 증가율변동의 42%가 전기의 이윤율에 의해 설명된다(Glyn *et al.*, 1990, Table 2.15).

Yoshikawa(1995)는 1955-1970년에 비해 197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이 둔화된 원인을 수요측면, 특히 투자의 정체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일본에서 농업부문의 축소와 제조업부문의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진 시기이고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과 이로 인한 가구수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였다.¹⁵⁾ 1955-1975년 사이에 일본의 인구증가는 20%에 그쳤지만 가구수는 80%나 늘었다. 이것은 농촌의 전통적인 대가족가구와는 달리 도시가구는 핵가족가구와 독신자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가구수의 증가는 냉장고, 세탁기, TV,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고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증가는 산업연관효과로 전산업에 대한 수요증가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고도성장기간은 주요 내구소비재의 빠른 가격하락과 실질임금의 상승이 지속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 소비재의 빠른 확산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1960년대 말이 되면서 이들 주요 내구소비재 국내시장은 거의 포화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조업 확장—인구이동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내구소비재 수요증가-고투자-고성장, 고소득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이 1970년대부터는 더 이상 작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성장정체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주요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고정투자의 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은 계속적인 새로운 내구소비재의 등장과 일본에서의 비교적 짧은 내구소비재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나 1960년대의 투자붐과 1970년대의 투자정체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기의 일본에서의 높은 투자율은 높은 저축률과 병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Feldstein-Horioka 명제에 준하여 높은 저축률이 높은 투자율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저축률이 일본에서 높은 이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불충분한 사회보장제도, 높은 주택가격, 급여에서 보너스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 등이 흔히 거론된 이유들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자본비용을 더욱 낮게 함으로써 투자를

15) 이것은 연도별 7개년 이동평균치의 산술평균임. Minami(1994, Table 6.1) 참조.

16) 일본에서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1차산업의 고용비중은 1950년의 48.3%에서 1989년에는 7.6%로 낮아졌다.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높은 저축률이 높은 투자율을 통하여 고도성장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높은 저축률은 고도성장의 결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Minami(1994, Ch. 6)가 보여 주듯이 일본에서 특히 개인저축률은 개인소득의 함수관계가 뚜렷하다.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한 것은 수출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5년의 7%대에서 1970년대 초에는 14%대로 높아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은 매우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의 급속한 증가와 수출주도의 성장과는 다르다. 수출증가가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확대에 생산성이 높아진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성장의 전인차역할을 한 것은 수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Krause and Sekiguchi(1976)는 일본 수출의 가격과 수량분석을 통하여 1960년대 성장은 수출주도의 성장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Minami(1994, p. 142)도 성장의 엔진으로 작용한 것은 수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Tsuru(1993, Ch. 3)도 수출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민간투자였다고 주장한다.

(2) 서독에서의 투자정체

서독에서 GNP에 대한 순고정투자의 비율은 1973년 이전까지는 대략 15% 수준이었으나 그 후 계속 낮아져 1980년대 후반에는 7% 정도로 떨어졌다. 이 결과 자본스톡의 증가율은 1960-1973년 기간의 연평균 6.1%에서 1973-1980년에는 3.8%로, 그리고 1980-1989년 기간에는 2.8%로 낮아졌다. 이러한 투자의 정체는 1970년대 초-1980년대 중반기간의 과거에 비해 매우 낮은 자본수익률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Giersch, Pague, and Schmieding(1992, pp. 207-218)은 1969-1974년 기간에 나타난 실질단위 노동비용의 상승과 1980년대의 높은 실질이자율수준이 낮은 자본수익률을 초래한 것이며, 이밖에 노사관계의 악화,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보조정책으로 인한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Carlin(1996)에 의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와는 달리 1970년대

17) 실제로 자본수익률의 변화추세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계속 낮아지는 것이었다(Carlin, 1996, p. 471).

독일의 저성장은 자본축적률의 저하에 기인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투자합수의 계량적 추정에서도 이윤율의 저하가 서독 투자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업채산성의 저하문제는 이 당시 경제정책에 영향력이 큰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Experts)의 보고서나 서독 중앙은행(Bundesbank)의 연차보고서에서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주제였다.

고도성장기 일본에서는 농업부문으로부터의 대대적인 노동이동이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의 늘어나는 노동수요를 충족시켰는데, 서독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이동이 물론 있었지만 일본에서처럼 대규모는 아니었다. 대신 서독은 1950년대에는 과거 독일 영토였던 동유럽지역으로부터의 노동유입이 있었고, 1961년에 베를린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 동독으로부터의 난민의 유입이 있어 노동공급의 문제가 없었다. 이후에 늘어나는 노동수요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의존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남부 유럽에서 이동해 왔는데, 총고용에 대한 외국인 노동의 비율은 1966년에 5.7% 수준에 달했고 1973년에는 최고수준인 10.8%에 이르렀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투입되어 이들 부문으로부터 정부부문을 포함하는 서비스부문으로 이동해 가는 서독 노동자들의 자리를 메우는 동시에, 늘어나는 노동수요를 충족시켰다.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축이 있을 때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¹⁸⁾

그러나 1973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신규 유입은 중단되어 이동성이 높은 '산업예비군'의 이용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나 이들 수요를 외국인 노동자가 메울 수 없었으므로 노동시장의 구조불균형이 자본수익률 저하를 통해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독에서의 실질임금은 196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간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주요 선진국에서 노조가입자의 비율이 상승했으며, 노조파업으로 인한 근로일수의 손실은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늘어났다. 서독의 경우는 노조가입비율은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낮았고, 파업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낮았다.¹⁹⁾ 따라서 서독에서, 노조세력의 확대가 이윤압박의 증

18) Giersch, Pague, and Schmieding, 1992, pp. 126-129.

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익집단의 성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안정이 지속되면 여러 형태의 이익 집단들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이들 이익집단들은 구성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나 법률제정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거나 카르텔을 형성하여 시장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가격을 인상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총생산의 더 많은 부분을 자신들이 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생산자단체, 전문직연합회, 과점생산자의 담합 등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대표적 조직들이다.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노력으로 구성원들을 위한 조세감면, 정부보조, 가격인상, 진입제한 등의 혜택을 획득한다면 이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사용의 비효율을 증가시키거나 생산의 감소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등장, 부문 간 수요의 이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성장을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이익집단이 얻는 이익에 비해 훨씬 큰 손실을 사회 전체가 입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리는 Olson(1982)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Olson(1982, Ch. 4)은 제2차 세계대전후 서독과 일본이 경험한 '경제의 기적'은 전쟁과 외국의 점령으로 이들 국가에서 기존의 분배목적의 조직들이 붕괴되고 새로운 제도와 법률하에서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봉쇄되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국이나 대만에서의 급속한 성장도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영국의 경제적 정체는 오랜 기간 동안 침략이나 혁명도 없이 안정된 민주주의 하에서 수많은 이익집단들이 존재하여 각급 정부 공무원과 정치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제도적 硬化(institutional sclerosis) 현상이 새로운 환경과 기술에 대한 적응을 더디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⁰⁾

19) Bruno and Sachs, 1985, pp. 167-169.

20) 이익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집단행동에 의해 구성원 개인에 돌아가는 이익은 작아지므로 집단행동의 유인은 규모가 작을수록 커진다. 이익집단의 규모가 크면 자신들의 행동에 따른 사회 전체의 손실이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분배를 위한 집단

이 논리를 다시 서독과 일본에 적용한다면 Olson(1996)이 말하듯이 1960년대까지의 고도성장 이후에도 안정된 사회가 지속되면서 재분배 목적의 이익단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이들 나라에서 성장률은 낮아진 것이라는 설명이 된다. 또한 영국에서 Thatcher 정부의 개혁은 이익집단의 대표격인 노조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New Zealand의 노동당 정부의 개혁은 기업의 로비와 카르텔의 피해를 축소시키기 위한 시장개방에 역점을 둔 것으로 두 경우 모두 제도적 경화현상을 축소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Giersch *et al.*(1992, pp. 74-75)은 서독의 고도성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Olson의 해석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미 1950년대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분야에서도 주요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영향력도 매우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Giersch *et al.*(1992, pp. 213-218)은 1970년대 이후 서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킨 요인으로서 두 가지를 특히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Olson의 견해와 일치되는 것이다. 첫째, 노사관계에서 1960년대에서와 같은 건설적 협력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1978년에 발생한 인쇄노조의 파업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자인쇄기술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어차피 도입될 수밖에 없는 노동절약적 혁신을 노조가 봉쇄한 사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서독의 노조는 실업대책이라는 구실로 주 35시간근무제를 위해 싸웠는데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한다기보다는 특정 부문이나 직종의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었다. 둘째,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들, 즉 농업, 광업, 조선, 철강 등에 집중된 현금 지급이나 조세감면형태의 정부보조가 1973년 이후 GNP의 4-5%의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시적 구조조정지원이라는 정책의도와는 달리 해당 이익집단들의 성공적인 로비에 의해 영구적인 지원이 된 것이다. 소매업, 은행, 보험, 통신 등 서비스부문에서의 규제도 합리적인 경제논리에서보다는 기존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로비활동의 산물이다.

일본에서도 이익집단은 일찍부터 빠르게 형성되었다. 1978년 현재 가장 영향력이 큰 252개의 이익집단을 대상으로 형성시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45년 이전은 9%이고 1946-55년 기간에 49%인 반면 1966년 이후에 형성된 것은 14%에 불과했다(Muramatsu and Krauss, 1987, p. 522).

행동의 유인은 작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으면 집단행동을 위한 조직화도 쉽다 (Olson, 1982, Ch. 3).

전후 대부분의 기간을 집권해 온 일본의 자민당은 전통적으로 대기업과 자영업자, 농업종사자의 지지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각 분야의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필요한 조정을 통해 되도록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지켜 왔다. 이익집단들의 로비대상은 의회보다는 행정관료들이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입법이 의회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서의 주도로 시작되는 일본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Murakami, 1987, pp. 68-69).

Muramatsu and Krauss(1987)에 의하면 주요 이익집단들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43%에서 많게는 100%의 집단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자주 관료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이익집단의 71%가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응답했다.

고도성장기에는 전체 소득의 크기가 급속히 팽창했기 때문에 이익집단들의 분배확대 요구를 수용하기가 용이했고 이들의 활동으로 인한 자원사용의 비효율성이나 성장저해효과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소득증가가 정체되는 시기에는 이들 이익집단의 성장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분배목적의 이익집단과 같은 제도적 측면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같은 이유로 서독이나 일본과 같은 특정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이익집단의 활동 정도나 이들의 폐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하기 매우 어렵다. 한 가지 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통합의 확대나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 국내에서의 금융개혁 등에 의한 수입제한 완화,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등의 정책변화는 이익집단들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이들이 과거에 달성한 배분왜곡을 해소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4. Catch-up 효과의 축소

고도성장의 지속은 고용의 확대와 낮은 실업률을 유발함으로써 임금상승의 압력을 크게 하고 생산성의 상승을 제약한다. 이로 인해 이윤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이윤의 감소는 저축의 감소를 가져오는 동시에 예상이윤을 낮춤으로써 자본축적을 위축시킨다. 만약 생산성의 증가가 빠르다면 임금이나 다른 투입물 가격의 빠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낮아지지 않아 투자수요는 위축되지

않고 따라서 고도성장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산성 증가의 둔화는 이윤율을 낮추어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정체를 가져오는 경로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본스톡이나 노동의 산출량증가를 둔화시켜 직접적으로 성장정체를 유발한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의 정체(productivity slowdown)는 이윤압박과 별도로 중요한 성장둔화의 요인이 된다.

서독과 일본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비교대상을 국내총생산 전체로 하느냐 아니면 제조업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비교시점이나 계산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결론은 1950년을 전후하여 미국에 비해 매우 낮았던 서독과 일본의 생산성 수준은 계속 빠르게 상승하여 미국과의 격차비율을 줄여나갔고, 또한 격차의 축소속도는 격차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성의 수렴현상은 소위 '후진성의 이점(advantages of backwardness)'이라는 말로 표현된다.²¹⁾

<표 3> 미국, 서독, 일본의 상대적 노동생산성

A. 노동시간당 GDP기준

	1950	1973	1984
미국	100.0	100.0	100.0
서독	33.6	72.8	90.5
일본	13.9	43.8	55.6

자료: Maddison(1987).

B. 제조업 노동자 1인당 산출량기준

	1950	1973	1989
미국	100.0	100.0	100.0
서독	36.5	55.3	59.3
일본	7.6	44.2	80.8

자료: Broadberry(1996), Crafts and Toniolo(1996)에서 재인용.

C. 제조업 노동시간당 산출량기준

	1950	1973	1989
미국	100	100	100
서독	39	75	80
일본	18	56	80

자료: van Ark(1993), Maddison(1994)에서 재인용.

후진성의 이점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Abramovitz and David(1996)는 다음의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첫째, 선도국에서 자본설비를 교체하거나 확장할 때 새로운 설비에 체화된 기술이 과거에 비한 개선 정도는 교체되는 설비의 사용기간 중 이루어진 기술진보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후진국에서는 사용중인 기술수준이 낮으므로 새로운 설비가 도입될 때 더 큰 폭의 기술진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둘째, 후진국에서는 1인당 자본비용이 낮으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고 따라서 자본축적이 촉진된다. 셋째, 후진국에서는 농업이나 소규모 자영업 등에서 대규모 기업으로 이동될 수 있는 노동의 여유가 많으므로 노동재배치에 따른 생산성 향상가능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다. 끝으로, 이상의 요인들에 의해 산출량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 생산규모에 의존하는 기술의 진보가 촉진된다. 이들 요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도국과의 격차가 클수록 catch-up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임을 말해 준다.

Nelson and Phelps(1966)가 제시한 다음의 기술확산식은 이러한 catch-up 현상을 적절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dot{A}(t) = \lambda[T(t) - A(t)].$$

여기서 $T(t)$ 는 t 시점에서 가능한 기술수준으로 선도국의 기술수준을 나타내고, $A(t)$ 는 후진국에서의 실제기술수준을 나타낸다. λ 는 앞선 생산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해당 국가의 평균교육수준, 시장규모, 경제제도 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일본의 19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1960년의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설명변수로 1960-1970년 사이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율을 회귀분석한 Hamada and Honda(1994)의 결과를 보면 ($T - A$)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성이 매우 높다. 인과관계의 테스트

21) catch-up이라는 용어는 흔히 convergenc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생산성에서 뒤진 나라들이 선두에 있는 나라와의 비율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의 상이한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convergence는 catch-up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에서도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라는 분명한 관계를 보였다.

앞의 〈표 2〉에서 보듯이 서독과 일본의 성장둔화에는 catch-up 효과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²²⁾ 선진국인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후진성의 이점에 의한 생산성 향상효과가 줄어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선 기술을 흡수함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catch-up의 정도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일본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미국의 수준을 따라가는 데는 새로운 품종, 비료, 영농기계의 사용뿐만 아니라 영농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는 일본의 정책하에서는 catch-up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유통분야에서의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정책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다. 〈표 3〉에서 보면 일본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비해 제조업만의 생산성이 1980년대에 와서 미국 수준에 많이 접근했는데 이것은 농업이나 서비스부문에서 catch-up 제약요인들이 많이 작용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bramovitz and David(1996)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195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이 catch-up 붐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보면 주요 선진국들의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 상당한 격차가 있다면 그것은 낙후된 생산기술의 사용 때문이 아니라 자본/노동 비율의 차이에 의한 것이거나 낮은 생산성 분야에 대한 보호정책과 같은 사회·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Abramovitz and David는 결론을 내린다.

5. 경제정책에 대한 사고의 변화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소득분배, 국제수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은 이들의 바람직한 수준이나 변화방향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과 정책노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정책당국의 인식이란 이들 개별변수의 기본적인 결정요인이나 개별변수들 간의 대체적 또는 보완적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 또한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파악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22) Carlin(1996)은 독일 성장에서의 catch-up 효과를 분석한 2개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1950-1973년 사이에 성장의 1/3 내지 1/2을 catch-up 효과가 설명하지만 1973년 이후에는 이 효과가 사라져 성장의 정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1973년 이후에도 catch-up 효과는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었으나 투자가 부진하여 성장의 정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인식과 정책방향이나 수단의 선택은 경제학자를 포함하는 여러 분야의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당대의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실제의 정책방향도 영향을 받는다.

성장의 황금기인 1950년대나 1960년대는 Keynes 경제학의 전성기였고 주요 선진국에서의 거시경제정책도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한 고용과 생산의 증가에 역점을 두는 것이었다. 인플레이션은 지나치게 낮은 실업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조절의 문제가 없고 필요한 경우 소득정책(income policy)수단을 사용하여 임금-물가의 연쇄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총생산의 조절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물가안정에 특히 역점을 둔 서독에서도 Erhard 정부는 1963년에 성장안정법(Growth and Stability Law)을 제정하고 고용증대를 위한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였다.²³⁾

1970년대 초 Bretton Woods체제의 붕괴와 석유파동은 고용확대와 성장추진에 역점을 두는 Keynes적 거시경제정책 방식에 대한 회의와 반론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가 간 정책협력과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였다. 경제학계에서도 Phillips curve식의 trade-off를 부정하며 적극적 안정정책의 폐해를 강조하는 화폐론자들의 주장이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Friedman은 일찍부터 변동환율제를 주장하였고, 자연실업률 이하로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은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만을 가져온다고 역설하였다. 신고전경제학(new classical economics)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 개입정책의 무력성을 역설하였다. Real Business Cycle이론은 경기변동 자체가 실물충격에 대한 사람들의 최적화행동의 결과이므로 경기대응적 정책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변동의 요인 자체가 수요측의 충격이 아니라 생산성이나 선호의 변동이므로 수요조절의 정책수단을 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화폐론자의 입장이나 신고전경제학의 주장에 대응하는 신케인스경제학(new Keynesian Economics)이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 분명한 추세는 정통케인스경제학의 몰락과 실제 거시경제정책에서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역할축소다. 정부의 예산적자의 축소와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국가

23) Maddison(1983).

들에서의 기본 정책방향이 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평균소득수준의 향상보다는 개인별 소득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정책방향도 이를 반영하여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급격히 발전되어 온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혹은 내생적 성장이론은 과거의 신고전파 성장이론에서와는 달리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적 자본의 축적이나 기술의 개발이나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가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만 활발할 뿐 정책결정자들의 이해나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V. 韓國에 對한 示唆點

이상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고도성장을 경험하고 1970년대부터 성장이 크게 둔화된 서독과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둔화를 가져온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서독과 일본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들 두 나라의 과거의 성장이 다른 나라들보다 빨랐고 성장둔화의 폭도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처럼 이들 나라의 성장 경험도 한때 '기적'으로 불리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한국과 이들 두 나라는 전쟁의 파괴를 겪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기적적인 성장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5년 또는 20년의 고도성장은 그 자체로서 성장을 정체시키는 요인들을 발생시키게 마련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윤을 저하로 인한 투자유인 축소, 유희노동력의 고갈과 취업자의 노동시간의 축소, catch-up 성장요인의 감소,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활동 확대, 사람들의 고도성장에 대한 가치평가가 저하 등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성장둔화 요인인데, 이들은 모두 성공적인 성장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고도성장의 시작은 1963년부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부터 1960년까지 GNP성장률의 평균은 4.3%였고, 1961년과 1962년의 성장률은 각각 5.6%와 2.2%에 불과했는데, 1963년과 1964년에

는 각각 9.1%와 9.6%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²⁴⁾ 1965-1980년 사이의 GDP 평균성장률은 9.9%였고, 1980-1989년 기간에는 9.7%였다.²⁵⁾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간 연도별 성장률의 평균은 7.7%였다. 1990년대의 성장률이 1970년대나 1980년대에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성장의 정체가 시작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연도별 성장률의 추세를 살펴보다도 하강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침체로 인한 1992년과 1993년의 5%대의 저성장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10년 혹은 20년을 전망할 때 아무도 과거와 같은 9%대의 성장을 예상하지 않는다. 8%대의 성장을 달성한다면 이는 매우 성공적인 고도성장이 될 것이고 7%대의 성장이라도 무난한 고도성장이라 할 수 있다. 좀 비관적인 예상은 4% 또는 5%대의 성장이다. 즉, 고도성장의 시대는 199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끝나고 있다고 보는 견해다.

정책결정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에게 장기적 성장률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실업,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등 경기변동적 요인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민간주체들은 자신의 일자리나 기업의 안정성, 임금수준이나 이윤의 상승가능성, 인플레이션, 세금제도 등 단기적으로 실질가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만 주시한다. 따라서,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국제수지적자, 낮은 성장률목표를 주장하는 소위 안정론자들이 정책당국이나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실업문제는 한국 경제의 현단계에서는 심한 경기침체만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1995년 현재의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 정도인데, 주요 선진국에서의 수준은 3만 달러 내외다. 어느 정도 풍요로운 소비와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1인당 소득수준을 3만 달러 정도로 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만약 1인당 소득수준이 매년 4%의 속도로 성장한다면 28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장속도가 7%라면 16년만 지나면 된다.

일본이나 독일의 성장정체의 요인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의 고도성장은 끝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의 이들 요인들의 상황이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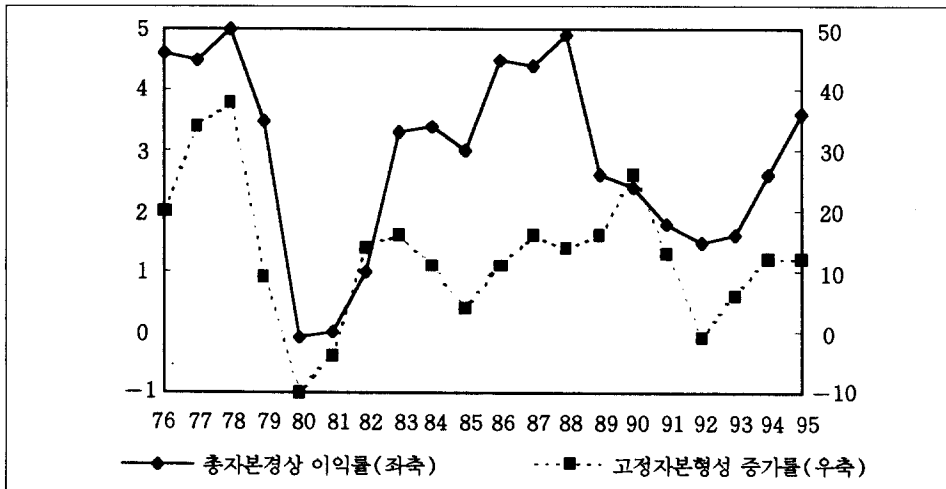
24) 경제기획원, 1980, p. 4 및 p. 564.

25) World Bank, 1991, p. 207.

먼저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의 증가둔화를 보자. 한국에서는 고도성장의 결과 이미 오래 전부터 유희노동력은 사라졌고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투입 증가의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교육이나 훈련의 확대를 통해 실효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올 여지는 많다. 또한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다. 여성인력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노동의 생산성이 낮거나 불완전 취업상태인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고용구조 변화를 통해서도 노동투입 증가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생산성 증가의 둔화, 빠른 임금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윤이 압박을 받고 이윤율의 하락은 투자의 위축을 가져와 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 이윤율의 하락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1>은 지난 20년간의 이윤율과 투자증가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어느 것도 감소의 추세를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 제조업의 총자본경상이익률이 경기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뚜렷하지만, 예컨대 1990년대에 와서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는 추세변동을 보이지는 않는다.²⁶⁾

<그림 1>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과 제조업의 총자본경상이익률



자료: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1995. 2;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8;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조사통계월보』 각호.

26)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은 총자본경상이익률 외에도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을 수록하고 있지만 이들 이윤율지표의 변화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전산업의 고정투자증가율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윤율과 마찬가지로 투자증가율도 경기변동과 같이 움직인다.

Krugman(1994)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들의 고도성장은 지나치게 자본축적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곧 자본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투자와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으리라 전망하였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Collins and Bosworth(1997)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싱가포르와 대만에서는 투자율의 감소경향이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자본/산출량 비율이 그 동안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도 일본의 수준에는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자본심화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노동자 1인당 자본장비율에서도 1994년 현재 한국의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이나 서독의 경험에서와 같은 생산성 증가의 뚜렷한 둔화현상도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1960-1971년 기간에는 연평균 8.9%의 비율로 상승하였으나 이 비율은 1971-1981년에는 4.0%로 낮아졌고, 1981-1992년 기간에는 다시 2.9%로 낮아졌다.²⁷⁾ 서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0-1990년 사이에 연평균 12%였는데, 1990-1995년 사이에는 11%로 여전히 높은 속도의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수준은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아직도 매우 낮기 때문에 catch-up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 <표 3>의 C는 제조업에서 노동시간당 산출량수준을 비교하고 있는데, 같은 자료에서 한국의 수준을 보면 1989년에 20으로 측정되고 있다. 즉, 1980년대 말에 한국의 생산성 수준은 미국 수준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는 1950년의 일본의 상대적 수준(18%)과 비슷하고 서독의 상대적 수준(39%)의 절반밖에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측정은 측정방법이나 대상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²⁸⁾ 어쨌든 가장 앞선 나라에 비해 한국의 생산성은 현재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catch-up효과를 통한 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 Ito, 1997, p. 237.

28) 예컨대, Collins and Bosworth(1996)의 계산에 의하면 노동자 1인당 산출량기준으로 1994년의 한국의 생산성은 미국의 44.6% 수준이고, 이는 1970년의 일본의 상대적 수준과 같다.

Olson(1982)이 말하는 이익집단들의 조직적 활동에 의한 효율성 저하 문제는 평가가 어렵다. 수십 년 동안 안정된 사회가 지속되면서 많은 이익집단들이 형성되었고 이들의 재분배 목적의 로비활동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방화 정책과 경쟁촉진 정책이 비교적 강력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수입자유화, 외국인 투자자유화, 진입장벽 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예가 된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보듯이 농업분야의 개방 등 독자적으로는 시행할 수 없었던 개방화가 다자간 협상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노동법 개정도 제도적 경화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고변화라는 관점에서는 고도성장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없다. 경제성장에 치중하는 정책이 분배의 불균등을 악화시키고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장속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잠재성장률의 범위 내에서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최근에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낮아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추구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개념은 유익하지만 이의 추정치는 신뢰하기 어렵다. 매우 대담한 가정과 단순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가정에 의거 추정했느냐에 따라 격차도 크다.²⁹⁾ 과거의 추정치를 보면 거의가 잠재생산이나 잠재성장률을 저평가하고 있다. 실제로는 특별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불균형의 문제가 없이 10년간 연평균 9.5% 이상의 성장을 했는데, 같은 기간 중 추정된 잠재성장률은 8.0%였다고 하는 식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당국의 성장목표는 여러 잠재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낮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1992-1996년 기간중 성장목표를 7.5%로 잡았다.³⁰⁾ 이는 이 계획의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제성장률이 9.9%였음에 비하면 매우 낮게 책정된 목표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다음 새롭게 작성한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29) 잠재성장률의 측정방법이나 기존의 추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영훈(1995) 참조.

30) 대한민국정부, 1993, pp. 352-353.

한 걸음 더 후퇴하여 1993-1997년 기간중 성장목표를 6.9%로 책정하였다.³¹⁾

이와 같은 성장목표의 하향조정 배경에 있는 생각은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과거보다 더욱 낮게 책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연평균 5-6%의 물가상승 대신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는 2-3%의 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5-6%의 인플레이션하에서도 인플레이션 가속화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화폐환상(money illusion)의 일종이거나 아니면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계층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낮은 인플레이션의 이점이 과대평가되는 까닭은 임금소득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그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고 잘못 믿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2010년대 초까지 지속된다면 50년이라는 유례없는 긴 기간의 고도성장이 될 것이며, 생활수준에서 선진국의 일원이 될 것이다. 서독이나 일본의 경험을 볼 때 50년의 고도성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일 수도 있지만 1960년대 초에 앞으로 30년간 고도성장을 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거의 없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성장이 곧 정체되리라고 믿을 근거는 별로 없다. 세계무역의 자유화 확대,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본격화, 외국기업의 국내진입 자유화,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그리고 기술개발과 혁신의 가속화 등은 특히 앞으로 한국에서 성장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들이다.

외국의 여러 학자들이나 기관의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 성장능력 평가나 경험적 분석을 통한 예측을 보더라도 한국 경제의 성장전망은 매우 밝다. 하나의 예로 Barro(1996)의 86개국의 최근 자료를 사용한 1996-2000년 기간의 성장예측을 보면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증가율을 나타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성장이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부진할 때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이제 고도성장의 시대는 갔다라든지 심각한 구조조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식의 논의로 한국의 장기적 성장능력을 깎아내린다면 실제의 성장능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31) 대한민국정부, 1993, pp. 352-353.

參 考 文 獻

1. 경제기획원, 『주요업무지표』, 1980.
2. 대한민국정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92-1996』, 1992.
3. 대한민국정부, 『신경제 5개년계획: 1993-1997』, 1993.
4. 이영훈,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추이 및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1995.
5. Abramovitz, Moses and Paul L. David, "Convergence and Deferred Catch-up: Productivity Leadership and the Waning of American Exceptionalism," in R. Landau, T. Taylor, and G. Wright, eds., *The Mosaic of Economic Growth*,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6. van Ark, B., "The ICOP Approach-Its Implications and Applicability," in A. Szirmai, B. van Ark, and D. Pilat, eds., *Explaining Economic Growth*, North Holland, 1993.
7. Armstrong, P., A. Glyn, and J. Harrison, *Capitalism since 1945*, 1991 (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출판사, 1993).
8. Bairoch, P., "The Main Trends in National Economic Disparitie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P. Bairoch and M. Levy-Loboyes, eds., *Dispar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Macmillan, 1981.
9. Barro, Robert J.,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2, pp. 1991, 407-443.
10. Barro, Robert J.,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NBER Working Paper*, No. 5698, 1996.
11. Baumol, William J., "Productivity Growth, Convergence, and Welfare: What the Long-run Data Show,"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1986, pp. 1072-1085.
12. Braun, Hans-Joachim, *The German Economy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13. Broadberry, S. N., "Convergence: What the Historical Record Shows," in B. van Ark and N. F. R. Crafts, eds., *Quantitative Aspects of Post-war European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4. Bruno, Michael and Jeffrey D. Sachs, *Economics of Worldwide Stagflation*, Basil Blackwell, 1985.
15. Carlin, Wendy, "West German Growth and Institutions, 1945-90," in Crafts and Toniolo, 1996.
16. Collins, Susan M. and Barry P. Bosworth,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Accumulation versus Assimil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2, 1997, pp. 135-203.
17. Crafts, Nicholas and Gianni Toniolo, eds., *Economic Growth in Europe since 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8. Dosi, Giovanni and Silvia Fabiani,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the Long-term Growth of Open Economies," in Gerald Silverberg and Luc Soete, eds., *The Economics of Growth and Technical Change*, Edward Elgar, 1994.
19. Giersch, Herbert, Karl-Heinz Pague, and Schmieding Holger, *The Fading Miracle: Four Decades of Market Economy in Germ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20. Glyn, A., A. Hughes, A. Lipietz, and A. Singh, "The Rise and Fall of the Golden Age," in Marglin and Schor, 1990.
21. Hamada, Koichi and Tetsushi Honda, "Engine of the Rising Sun: Productivity Growth in Postwar Japan," in M. Baldassarri, L. Paganetto, and E. S. Phelps, ed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Growth Rates*, St. Martin's Press, 1994.
22. Ito, Takatoshi, "Japan and the Asian Economies: A 'Miracle' in Transi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2, 1996.
23. Krause, Lawrence B. and Suetō Sekiguchi, "Japan and the World Economy," in Hugh Patrick and Henry Rosovsky, eds., *Asia's New Giant: How the Japanese Economy Works*, Brookings Institution, 1976.
24. Krugman, Paul,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No. 6, 1994, pp. 62-78.
25. Kunio, Yoshihara,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26. Maddison, Angus, "Economic Stagnation Since 1973: Its Nature and Causes: A Six Country Survey," *De Economist*, Vol. 131, No. 4, 1983, pp. 586-608.
27. Maddison, Angus, "Growth and Slowdown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Techniques of Quantitative Assess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June 1987.
28. Maddison, Angus, "Explain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ations, 1820-1989," in W. J. Baumol, R. R. Nelson, and E. N. Wolff, eds., *Convergence of Productivity: Cross-National Studies and Historical Evi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29. Mankiw, N. Gregory, David Romer, and David N. Weil,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No. 2, 1992, pp. 407-437.
30. Marglin, Stephen A. and Juliet B. Schor, 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Reinterpreting the Postwar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31. Minami, Ryosh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A Quantitative Study*, 2nd ed., Macmillan, 1994.
32. Murakami, Yasusuke, "The Japanese Model of Political Economy," in Yamamura and Yasuba, 1987.
33. Muramatsu, Michico and Ellis S. Krauss, "The Conservative Policy Line and the Development of Patterned Pluralism," in Yamamura and Yasuba, 1987.
34. Nelson, R. R. and E. S. Phelps, "Investment in Humans, Technological Diffusion and Economic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 1966, pp. 69-75.
35. Okabe, Mitsuaki, ed.,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Economy: Changes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ronts*, Macmillan, 1995.
36. Olson, Mancur,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Yale University Press,

1995.

37. Olson, Mancur, "Big Bills Left on the Sidewalk: Why Some Nations are Rich, and Others Poo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pring, 1996, pp. 3-24.
38. Tsuru, Shigeto, *Japan's Capitalism: Creative Defeat and Beyo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39. Yamamura, Kozo and Yasukichi Yasuba,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 1. *The Domestic Transform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40. Yoshikawa, Hiroshi, "High Economic Growth and Its End in Japan: An Explanation by a model of Demand-led Growth," in Okabe, 1995.